

2017년 업무보고
“튼튼한경제”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금융부문 방파제를 탄탄하게 쌓고,
민생 안정에 매진하겠습니다

2017. 1. 5

금 용 위 원 회

I. 지난 4년간의 평가 (1)

금융개혁으로 금융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 금융개혁으로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

○ 금융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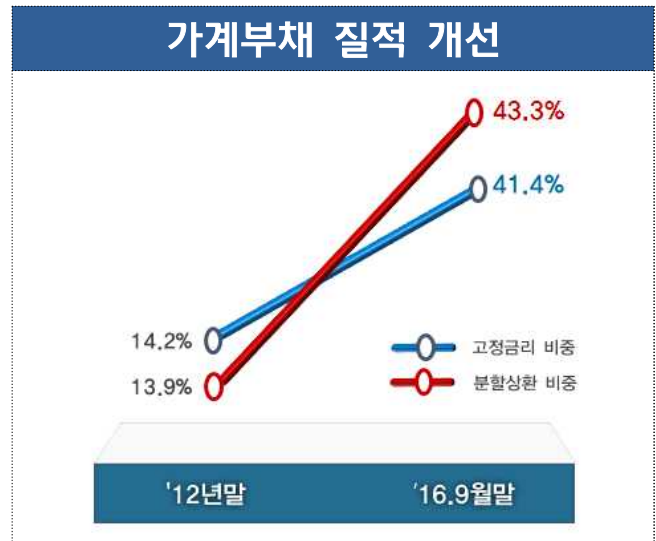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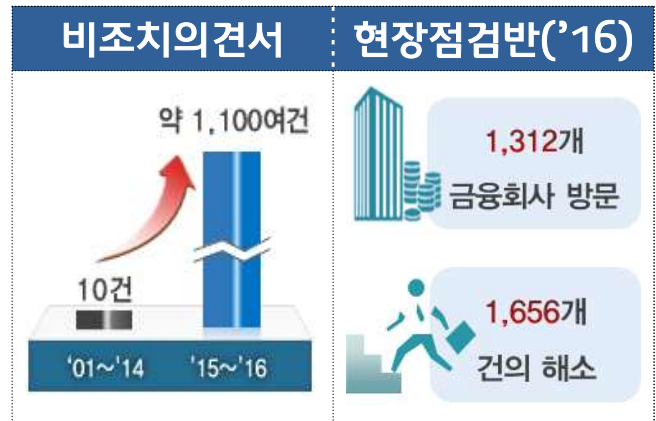
* 법령규제(211건), 그림자규제(650건), 자율규제(99개 규정) 개선

○ 검사제재 개혁,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현장점검반 출범('15.4월) 등 금융당국이 먼저 변화

○ 계좌이동서비스(14개월간 약 1,020만명 이용),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시

□ 가계부채 질적 개선 등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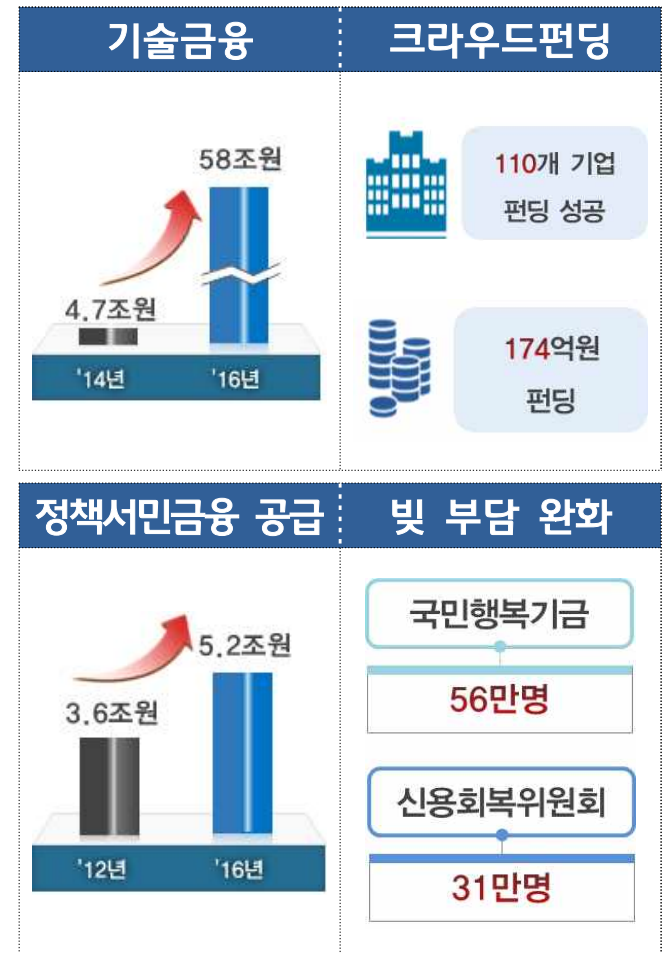
○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확대로 “값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관행이 정착



1. 지난 4년간의 평가 (2)

실물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서민층의 자활과 재기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기술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실물경제 지원 강화**
 - 기술금융 정착 및 활성화('14.7월~)
 - 크라우드펀딩, 코넥스 등 모험자본 공급 확대
-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대폭 확대**
 - 국민행복기금('13.3월)을 통한 장기연체자 구제
 - 서민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대폭 확대
 - 원스톱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범('16.9월)



II. 2017년 정책 여건

□ [정책여건]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는 상황

- 세계경제는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기조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아직까지 국내 금융시장/금융산업은 안정적인 모습
→ 상황에 따라 주가, 금리 등의 변동성 확대 소지
- 가계부채 관리,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완화 등 국내 리스크요인 철저 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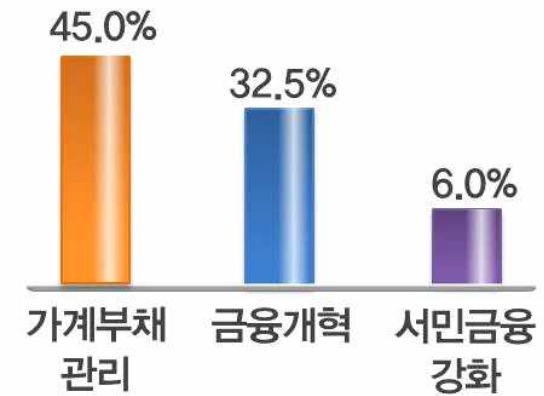
□ [현장 목소리] 내년도 금융부문 중점 추진과제로 가계부채 관리, 금융개혁, 서민금융 등이 강조

* 대국민 서베이('16.12월),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

시장금리 상승세 (韓·美 국채 10년물)



'17년 중점 추진과제 : 현장의 목소리



* 대국민 서베이('16.12월)

Ⅲ. 주요 업무계획

2017년 금융위원회는 ①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가운데,
 ② 민생안정과 ③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

3대 전략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1) 금융시장 안정 강화	(5) 서민 금융지원 확대	(9)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2) 가계부채 관리 강화	(6) 중소기업 지원 강화	(10) 창업·기술혁신 기업 지원
	(3) 한계기업 구조조정	(7) 취약차주 보호 강화	(11)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
	(4) 금융시장 질서 확립	(8)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2)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12대 과제			
금융부문 방파제를 탄탄하게 쌓고, 민생안정에 매진하겠습니다.			

전략 I |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

(1) 금융시장 안정 강화

□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대응체계 강화

○ 민·관 합동의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운영

* 금융시장, 서민금융, 기업금융, 금융산업 등 분야별 위험요인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간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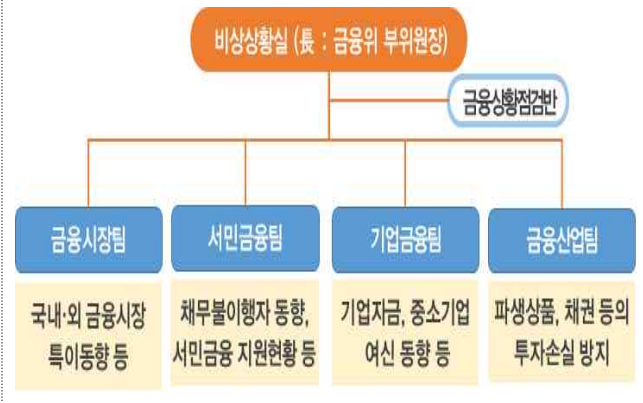
○ 업권별 스트레스테스트 상시화(전담팀 구성)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철저히 대비

○ 회사채 유동화 보증(P-CBO, 1.6조원),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0.5조원) 등 시행

○ 필요시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등 비상조치도 철저히 사전 준비

민·관 합동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체계



채권시장안정 3종 세트



(2) 가계부채 관리 강화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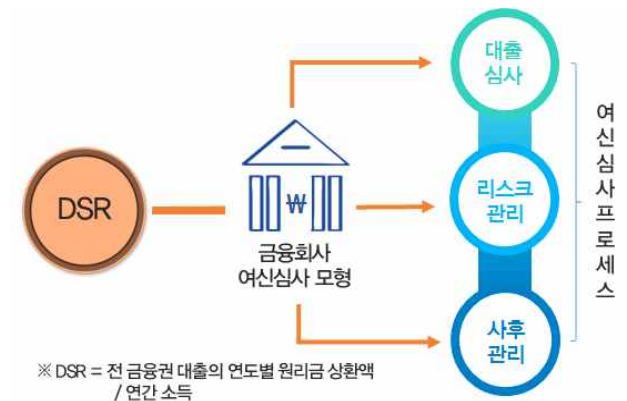
□ 선진형 여신심사 원칙을 가계부채 모든 부문에 정착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쏠업권·쏠대출에 적용
 - ➔ “값을 수 있는 만큼 빌려”,
“조금이라도 나눠 갚는” 관행 정착
- 질적 구조개선 목표비율('17년) 상향 조정
 - * 고정금리 목표 : (당초) 42.5% → (상향) 45.0%
 - 분할상환 목표 : (당초) 50.0% → (상향) 55.0%
-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로드맵 마련
 - 여신심사 시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참고지표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17년)
 - *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규모·일정을 감안·심사
 - 금융회사가 DSR을 내부 여신평가모형 등에
자율적으로 반영('18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확대



DSR 적용 (예시)



(2) 가계부채 관리 강화 ②

□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상품 공급

- 전세 세입자 : 전세자금분할상환 대출('17.1월)
- 분양주택 입주자 :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17.1월)
- 서민층 : 책임한정* (비소구형) 주담대 시범실시
 - * 대출에 따른 차주 책임이 담보물 가치로 한정
→ 담보물 처분액이 대출액 상환에 부족한 경우에도 차주 면책
 - ※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중 서민층(연소득 3천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17.상)
- 고령층 : 내집연금 상품 개선
 - 배우자명의 주담대도 주택연금을 인출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17.1분기)
 - 기존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축소되었던 주택연금 월지급금 회복('17.4분기)

전세자금대출 분할상환 (예시)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예시)



(2) 가계부채 관리 강화 ③

□ **자영업자의 생계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되, 대출 리스크 관리를 보다 정교화**

○ (자금공급)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신설, 미소금융 확대**

○ (컨설팅) **경영노하우 전수·재무관리 등 상담**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 (재기지원) **신복위 등을 통한 재기지원 프로그램 마련**

○ (리스크관리) **과밀지역·업종 등 사업성심사 강화**

소상공인 자금지원



금리우대(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 운영(기은)

미소금융 확대



자영업자 대출 업종별 분포



(3) 한계기업 구조조정 ①

- 일관된 원칙 하에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 조선·해운 이외의 여타산업에 대한 잠재리스크를 정밀 분석 →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관계부처 합동)
 - 상시적인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 주채권은행의 구조조정 진행사항을 분기별 점검·공개(연 1회)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
 - 취약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자산매입 후 재임대사업’ 확대(1천억원→5천억원)

구조조정 대상 기업(대기업+중소기업)



취약기업 자산매입 후 재임대



(3) 한계기업 구조조정 ②

□ 새로운 구조조정 틀 마련

○ Pre-Packaged 제도 활성화

➔ 워크아웃(기촉법)과 회생절차(통합도산법)의 장점을 합쳐 조속한 기업정상화 달성 가능

○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구조조정 시스템 활성화

Pre-Packaged 제도 개요



워크아웃(신규 자금지원)과 회생관리(채무조정) 각각의 장점을 결합한 Pre-Packaged 플랜 활성화 지원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현황 및 문제점

- 온정적 신용위험 평가 → 대상기업 선정 지연
- 부실채권 가격 합의 곤란 → 원활한 매각 곤란
- 구조조정채권 시장 미발달 → 시장 내 인수자 부족

개선

-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
- 독립 평가기관에서 가치평가
- 기업구조조정펀드 신설

(4) 금융시장 질서 확립

□ 기업경영 및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

○ 회계제도 개편 종합방안 마련('17.1분기)

* 예) 회계감리 강화, 비감사용역 금지항목 확대 등

○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추진

○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규준(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유도('17.1분기)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상시)

* 모바일 포렌식 도입('17.상)으로 주가조작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 확보 및 분석 신속성 제고

○ 인공지능 기반 자금세탁 심사시스템 구축('17~'19)

금융시장 질서 확립 체계



인공지능 기반 자금세탁 심사시스템



- ✓ 심사의 정확성 및 속도 향상
- ✓ 신종 자금세탁 유형 적발
- ✓ 지하경제 양성화 등

전략 II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5) 서민 금융지원 확대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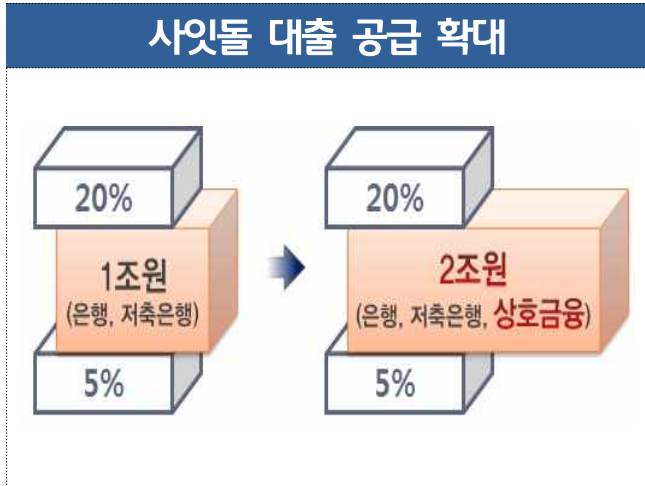
□ **촉촉하고 견고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 정책 서민금융 공급역량 확대(연 5.7→7.0조원)
- 한부모가정, 새터민,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확대**

* 저리 생계자금대출 지원(3.0~4.5%, 1,200만원, 미소금융)

* 한부모가정(→학자금 대출), 새터민(→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등 대상별로 정교한 지원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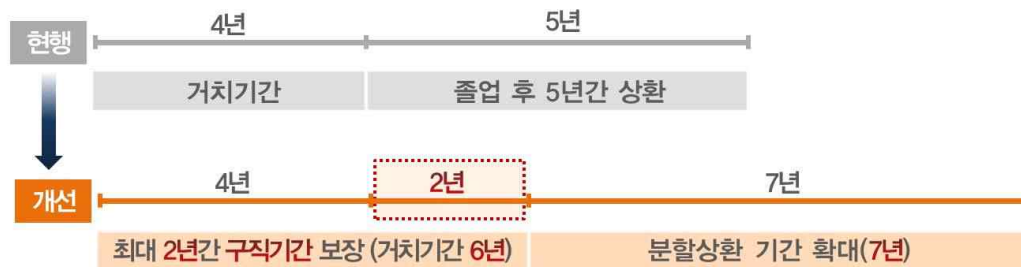
-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한도 확대(500→1,000만원)
- **사잇돌대출(중금리대출) 공급 규모(1→2조원) 및 취급기관 확대(은행, 저축은행→상호금융도 추가)**



(5) 서민 금융지원 확대 ②

□ 청년·대학생 대상 햇살론 지원 확대

- 생활자금 지원한도 확대
- 저소득 청년·대학생 전용 임차보증금 대출 신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 장애인의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 대출, 카드발급, 보험가입 거절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17.상)

청년·대학생 대상 햇살론 주요 내용



(6)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확장적으로 운영

- 정책금융 지원을 전년대비 6.8조원 확대
- 구조조정 협력업체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 원금상환 유예(원칙 1년), 자금지원(업체당 50~70억원, 산은)

□ 중소기업 지원 119프로그램 신설('17.1월~)

-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보증 지원

* 최대 4년간 필요자금에 대해 60~70% 보증 제공
→ 위기극복에 성공한 기업은 우대보증(90%) 추가 지원

정책금융 지원 확대

중소기업 지원규모 확대



중소기업 보증 지원



보증비율 ↑ : 40 → 60~70%

보증기간 ↑ : 3년 (+ 1년)

(7) 취약차주 보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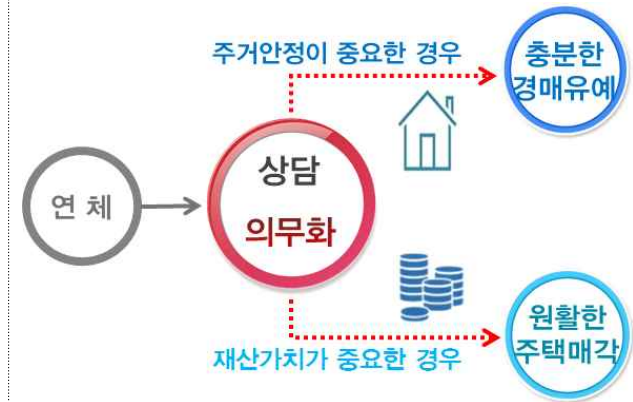
□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

- 실직·폐업 등 일시적 위기 발생시 원금상환 유예
- 담보권 실행절차 진행 전 차주상담을 의무화
- 연체이자율 부과체계 합리화 추진

□ 연체발생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 연체 前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활성화,
연체 後 성실상환자 재기 지원 강화

담보권 실행절차 개선



채무조정 지원



(8)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불법·불건전 금융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 유사수신행위 등 신종 금융사기 단속·처벌 강화
-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진입규제 및 감독 강화
-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관계기관(FIU, 대검 등) 간 정보공유 확대

□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정비

- 금융상품 계약 철회권(Cooling-off) 대상 확대 (대출 등→여타 금융상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독립투자자문업(IFA) 육성('17.3월)

불법·불건전 금융행위 엄정대응



독립투자자문업(IFA) 육성



독립투자자문을 통한 안정적인
재산증식 지원

전략 III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9)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 정책금융 역량을 최대한 가동

- 공급규모를 사상 최대수준으로 확대(179→187조원)
- 신성장동력 산업에 85조원 집중 지원

□ 금융부문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 인터넷은행, 핀테크 관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

* '16년중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서 총 400여명 신규채용

-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취업연계(금융권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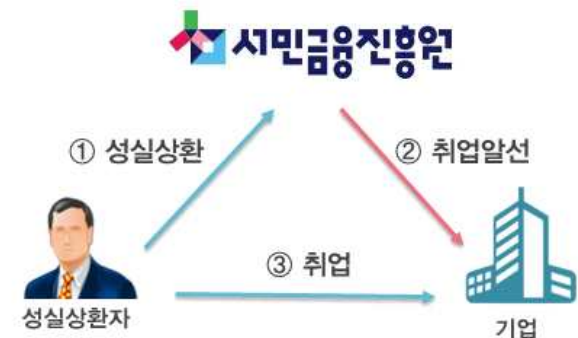
* 예) 금융회사 거래기업에 서민상품 성실상환자 등 취업 알선

정책금융 규모(산은, 기은, 산기보)

(단위 : 조원)



서민금융진흥원 취업연계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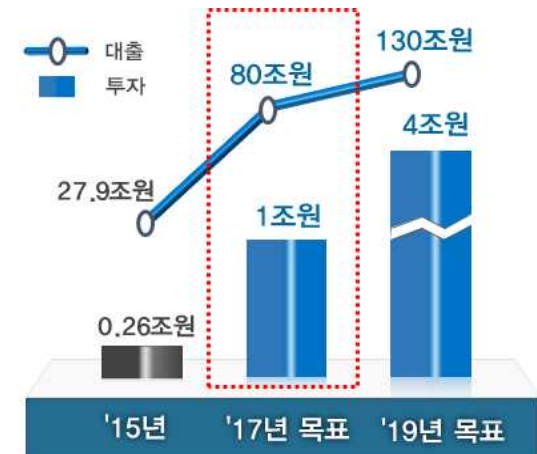


(10) 창업·기술혁신 기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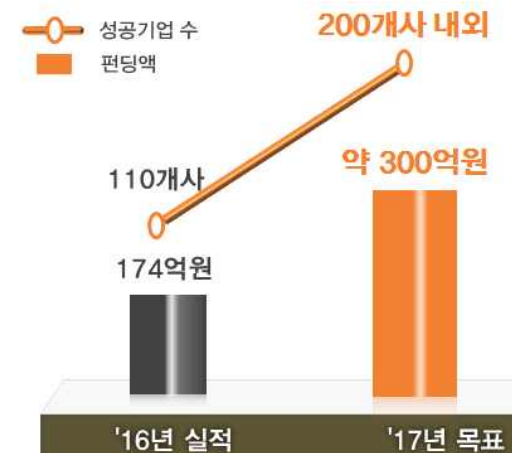
□ 기술금융 등을 통해 창업기업 지원 대폭 확대

- 기술금융 공급규모를 대폭 확대
(’17년까지 대출 80조원, 투자 1조원 공급)
- 성장사다리펀드 추가조성(’16말 6.3조원→’17말 7.2조원),
초대형 IB(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등
모험자본 공급 확대
- 크라우드펀딩,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
- 한 번 실패한 기업에 대한 재창업 지원 확대
(산·기보 재기지원 보증 활성화)

기술금융 공급규모 확대 목표



크라우드펀딩 추진 실적 및 목표



(11)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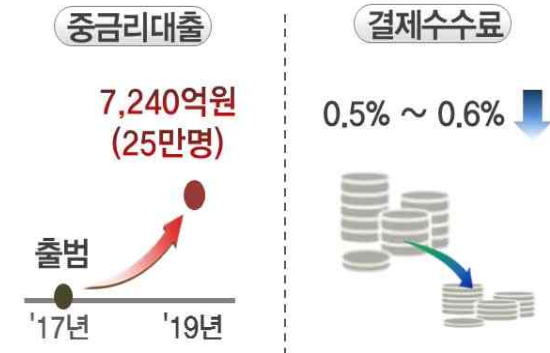
□ 금융개혁 안착·상시화를 통한 국민체감도 제고

- 금융개혁 입법을 조속히 완료
- 현장점검반 활동 확대(금융회사 → 기업, 소비자)

□ 경쟁 촉진을 통한 금융업 경쟁력 제고 유도

-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17년초)
- 신탁제도 전면 개편(종합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 자동차보험을 새로운 여건에 맞도록 합리화
- 글로벌 수준에 맞는 금융지주회사 제도 정비
(지주내 자회사간 겸직, 업무위탁, 정보공유 등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 기대효과



자동차보험 합리화 (예시)



(12)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마련

- 미래 핵심 금융인프라인 **블록체인** 등 선제적 준비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채널과 이용시간 확대

* (이용채널) 인터넷 → 은행창구, 모바일App까지 확대

* (이용시간) 17시 → 22시 [퇴근후에도 이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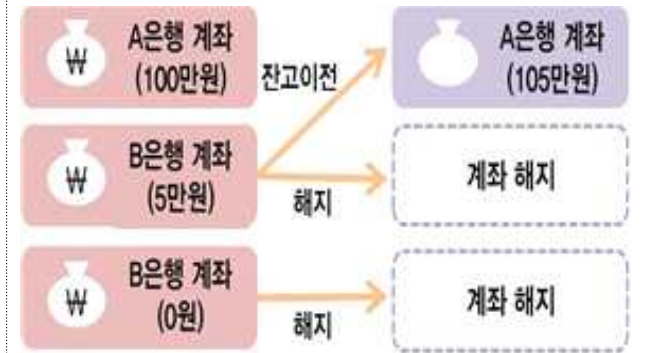
- **실물카드 없이 카드결제**가 가능한 **바이오페이** 도입('17.상, 시범출시)

* 예) 손바닥정맥 등 바이오정보로 인식하고 결제 가능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가동('17.상)

* 혁신기업들이 규제부담 없이 사업테스트 가능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효과



▶ 출시 이후 3주 만에 238만계좌 해지, 170억원 잔고이전

바이오 페이 (예시)



“尙有十二”

금융부문 방파제를 탄탄하게 쌓고,
민생 안정에 매진하겠습니다